Issues & Insights
on Economy, Technology, and Security

발행처 경제기술안보연구원
발행인 김성한

제37호 (26-06) 2026년 06월 23일

미 상무부의 앤스로픽에 대한 초강경 수출통제: 한국의 경제안보에 주는 시사점

The U.S. Hardline Export Controls against Anthropic: Implications for ROK's Economic Security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전 국가안보실 3차장)

<초록>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12일 탈옥(Jailbreaker) 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인프라 훼손 가능성을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앤스로픽(Anthropic)의 신규 AI 모델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전면적인 수출통제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는 첨단 AI 모델의 방대한 지식과 추론 능력이 필터링 없이 테러 단체나 적대국에 넘어갈 경우, 생물학 무기 제조・제로데이 사이버 공격・딥페이크 인지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앤스로픽은 해당 조치가 타사 대비 불공정하고 과도한 제재이며, 본질적으로는 대규모 감시 및 자율 살상무기 활용을 금지한 자사 약관을 고수하다 빚어진 미 국방부의 당파적이고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반박한다. 한국은 앤스로픽 사태와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서비스 강제 차단(스위치 오프 리스크)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할 백업 시스템으로서 자생적인 '소버린 AI'를 육성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기업들은 비시민권자 접근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간주 수출(deemed export) 규제 비용에 대비해야 하며, 급작스럽게 시행될 수 있는 미국 행정부의 제한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막기 위해 글로벌 계약 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필수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Abstract>

On June 12,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mplemented comprehensive export controls on Anthropic's new AI models, Fable 5 and Mythos 5, classifying the potential compromise of cyber-security infrastructure using jailbreaking techniques as a severe national security threat. The U.S. government determined that if the vast knowledge and inference capabilities of advanced AI models fall into the hands of terrorist groups or hostile nations without filtering, they could be exploited for manufacturing biological weapons, launching zero-day cyber-attacks, and conducting deepfake cognitive warfare. In response, Anthropic counters that the U.S. government's measure is an unfair and excessive sanction compared to its competitors, and is essentially a partisan and political retaliation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DoD) resulting from the company's adherence to its terms of service, which prohibit the use of its models for mass surveillance and fully autonomous weapons. To prepare for sudden forced service shutdowns by the U.S. (switch-off risk) as seen in the Anthropic case, ROK must foster an indigenous "Sovereign AI" as a backup system that will serve as a minimum line of defense, even if it means bearing massive maintenance costs. Furthermore, domestic companies must prepare for the costs of extreme "deemed export" regulations that block access by non-citizens, and it is imperative that they include force majeure clauses in global contracts to prevent penalty disputes arising from abrupt restrictions by the U.S. administration.

□ 미 상무부의 앤스로픽 수출통제의 배경과 주요 지침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12일 미국의 대표적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앤스로픽(Anthropic)의 최신 AI 모델인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에 대한 수출통제 지침을 하달했다. 수출통제의 명분은 앤스로픽이 6월 9일 새롭게 출시한 생성형 AI 모델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최상위 등급이었던 오퍼스(Opus)를 뛰어넘는 미토스 클래스의 첫 번째 모델을 출시하였던 앤스로픽으로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출시된 모델은 하이쿠, 소넷, 오퍼스로 이어지는 기존의 모델에서 벗어나, 신화를 의미하는 미토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단순히 인간의 지시를 따르는 모델이 아닌 독자적인 추론 능력을 지녔음을 상징하였다. 그러나 고위험 영역에 접근할 때 모델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도록 별도의 AI 안전장치가 설치된 대중 보급형 페이블 5 모델과 달리 안전장치의 제약을 푼 미토스 5 모델이 상무부의 표적이 되었다.[1] 또한 동 조치는 AI 모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수출통제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앤스로픽에 대한 수출통제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였는가? 그 배경과 수출통제의 주요 지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하워드 러트닉(Howard W. Lutnick) 상무부 장관은 앤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에게 서한을 보내 '기술적 보안'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서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2]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전적으로 앤스로픽 측의 공식 발표에 의존하고 있다.[3] 앤스로픽의 전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앤스로픽의 최신 AI 모델인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서 사용자가 보안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특수한 '탈옥(Jailbreaker)' 기법이 발견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미국의

1) 안전장치가 완전히 해제된 미토스 5는 일반 기업이 아닌, 철저한 신원 조회와 검증을 거친 극소수의 특정 기관(미국 정부 당국 및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는 최상위 등급의 사이버 보안 기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허용되었다.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은 앤스로픽이 안전장치가 완전히 해제된 최상위 모델을 외부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폐쇄형 첨단 AI 연구 및 레드티밍 파트너십'이다. 즉 일반적인 상업용 B2B 계약이 아니며, AI 파괴적 잠재력(제로데이 취약점 자동화, 생화학무기 제조기법 생성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모델이 지닌 극단적 위험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자를 철저히 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앤스로픽은 참여 기업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Brian Egan, "Legal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Anthropic Export Control Directive," Just Security, June 15, 2026.

3)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라 미 상무부는 대외적인 공표 없이 개별 기업에 서한 형태의 비공개 통지 형태로 수출 면허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하고 직접적인 국가안보 위협으로 공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상적으로 역외에 적용하는 방식과는 달리 미국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비시민권자(외국 국적자)'에게 전면 금지할 것으로 지시했다. 또한 이미 동 모델을 사용 중인 고객사들과의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적·물리적 유예 기간을 일절 부여하지 않고 즉시 지침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 첨단 AI 모델의 잠재적 위험성: 탈옥 논란

AI 모델의 잠재적 위험성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프롬프트(명령어)를 조작하여, 개발사가 설정해 둔 안전장치(guardrails)와 윤리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금지된 답변을 유도하는 해킹 기법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오픈 AI, 제미나이, 앤스로픽의 AI 모델 모두 혐오 표현, 범죄 모의, 무기 제조법 등의 명령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이 경우 탈옥은 개발사가 설정한 장벽(감옥)을 사용자가 교묘하게 우회하는 것을 말한다.

미 상무부와 국방부는 탈옥을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첨단 AI 모델이 가진 방대한 지식과 추론 능력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범죄자나 적대국에 넘어가게 되면 심각한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인이나 테러 단체가 AI 추론 능력을 이용해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나 폭발물 제조 기법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로데이(Zero-day) 취약점을 공격하는 악성코드나, 기존 백신을 회피하는 바이러스 코드를 AI가 대량으로 생성하게 만들어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4] 이밖에 현지 문화와 언어에 완벽히 동화된 딥페이크 대본이나 가짜 뉴스를 무제한으로 생성하여 대규모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첨단 AI 모델의 취약점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미 상무부의 앤스로픽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첨단 AI 모델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해석과 통제 기준에 있다. 우선 상무부는 앤스로픽의 미토스

4) 제로 데이 공격이란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취약점을 인지하고 패치(patch)를 배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공격을 말한다. 현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즉각적으로 제로데이 해킹 공격이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진 공격자가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정보기관들이 가장 경계하는 실재적 사이버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숨겨진 허점을 찾기 위해 수개월이 걸리던 작업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커들에게 생성형 AI는 매우 소중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5에서 발견된 특정 탈옥 기법이 미국의 사이버 안보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유례없는 수준의 중대 결함을 지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무부는 취약점이 완벽히 패치될 때까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앤스로픽은 자신의 첨단 AI 모델에 대해서만 취약점을 문제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잠재적 위험성은 오픈 AI를 비롯해 다른 생성형 AI 모델에 공통되는 문제점이며, 해당 탈옥은 극히 특수한 경우에만 작동하는 경미한 취약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타사의 공개 모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앤스로픽에 대해서만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징벌적 제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앤스로픽은 이번 조치가 금년 초부터 미 국방부와 앤스로픽의 갈등에서 비롯된 당파적 보복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 미 국방부와 앤스로픽의 당파적 전투

2026년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와 앤스로픽 간의 대립과 갈등은 이념적 낙인과 정치적 보복이 결합된 당파적 전투(partisan battle)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갈등의 시발은 금년 2월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 범위와 대규모 국내 감시에 대한 미 국방부와 앤스로픽 간의 통제권 충돌에서 비롯된다. 앤스로픽은 2025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사의 AI 모델이 대규모 국내 감시(mass domestic surveillance) 및 완전 자율 살상무기(fully autonomous weapons)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부 장관은 AI 모델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앤스로픽의 서비스 약관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앤스로픽은 안전장치 완화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5]

앤스로픽의 거부 직후, 국방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이고 강경한 행정적·재무적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앤스로픽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약 2억 달러(추정치) 규모의 AI 도입 계약을 즉각 취소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앤스로픽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화웨이와 같은 외국의 적대적 기업에 적용되는 조치인데, 미국의 선도적 AI 기업에게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미 국방부와 앤스로픽은 어떤 거래 관계도 체결할 수 없게 배제되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5) Mark Dalton, "The Fable Fiasco: A Bad Idea Applied Badly," R Street, June 14, 2026.

앤스로픽을 '급진 좌파, 워크(Woke) AI'로 공개적으로 지칭했다. 이는 기업이 자신의 약관을 통해 안전장치를 고수하는 것을 당파적 반국가행위로 규정한 것이었다. 앤스로픽이 트럼프 정부와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사이에 경쟁사인 오픈 AI는 앤스로픽이 요구했던 안전장치에 대한 제약 조건 없이 국방부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며 미 국방부의 군사 AI 공급망을 장악했다.

미 국방부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지정된 앤스로픽은 3월 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월 말 지방법원은 앤스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사용한 '워크 AI' 등의 발언을 인용하며, 해당 제재가 실질적인 안보 위협과 우려를 지적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약관 고수를 처벌하기 위한 당파적 보복에 가깝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4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공급망 위험' 지정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이 원치 않는 핵심 AI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도록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행정부의 국가 안보적 재량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3월과 4월 국방부와 앤스로픽의 소송은 단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일 뿐이다. 즉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자체가 합법적이고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미 수출통제 정책의 기조 변화인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년 미 의회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중국을 겨냥한 맞춤형 수출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대중국 수출통제를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AI 역량 강화에 직결되는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통제 기준을 설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앞둔 2024년 12월 중국의 AI 기술 추격을 확실히 따돌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로 'AI 확산 방지 규칙(AI Diffusion Rule)'을 제정하여 AI 첨단 칩에 대한 포괄적 수출통제 조치를 마련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특히 2025년 1월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미국의 AI 생성형 모델에 버금가는 모델을 출시하자 월가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한 미 의회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 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딥시크 사태가 발생하자 4월 중국에 수출이 허용되었던 엔비디아의 낮은 사양의 AI 칩(H20)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5월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방지 규칙'을 전격 철회했고, 8월에는 H2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12월에는 H20보다 성능이 좋은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파격적 조치는 중국의 AI 산업이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도록 유도하려면 '관리된 개방' 전략으로 중국이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최고 사양이 아닌 한 일정 수준의 미국의 AI 칩을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입하던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직접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알리바바를 포함한 약 10개의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구매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미 의회는 크게 반발하였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026년 4월 'AI 감시법(AI Overwatch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원천 차단하고, 의회가 H200 수출 면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 정책은 AI 반도체 수출에 있어 바이든 정부에 비해 크게 완화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026년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심 쟁점인 AI 및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기업 규제 완화 및 관리된 개방전략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에 대해 상당히 유화적인 수출통제 정책을 펼쳤으나, 6월 1일 전격적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번에 강화된 대중 수출통제 지침은 첫째, 중국 본토에만 적용되었던 통제 조치를 수입 법인의 최종 실소유주가 중국 기업이거나 중국 자본이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중국 수출에 적용되는 사전 승인심사를 받도록 강제했다. 둘째, 물리적인 반도체 칩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제3국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첨단 AI 연산 인프라를 임대해 사용하는 행위 역시 통제 범위에 포함되었다. 즉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는 중국계 고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대여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 신원 확인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 셋째,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의 설계 업체는 물론, 동

제품을 유통하는 상업적 중개인과 엔비디아 칩의 공급망에 포함된 업체들도 최종 용도 확인(EUM: End-Use Monitoring) 책임을 강화했다. 즉 현지 파트너가 칩을 중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정황을 기업 스스로 적발하고 차단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 역시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하여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습적으로 수출통제 정책을 강화한 배경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AI 첨단 칩에 대한 하드웨어 통제 실패에 대한 비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에 대한 통제 실패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는 앤스로픽과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AI 생성형 모델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즉 AI 컴퓨팅 칩의 대중국 유입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상용화된 AI 모델을 직접 활용하는 접근권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 한국의 경제안보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AI 수출통제망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한국의 경제안보에 주는 파장과 시사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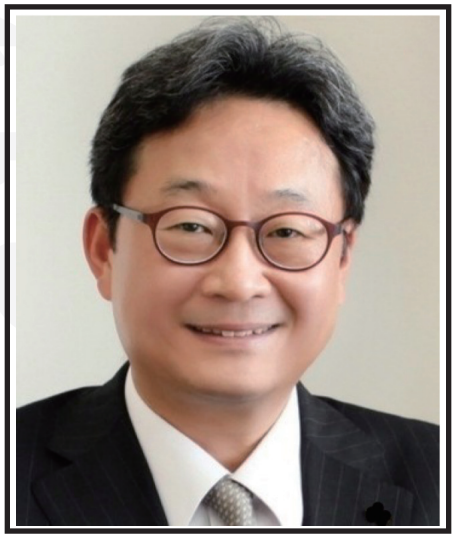
첫째, 미 상무부의 앤스로픽 접속 차단은 향후 타국의 생성형 모델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강제적으로 차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스위치 오프 리스크(switch-off risk)'를 현실화했다. 물론 현시점에서 각국이 AI 주권을 강화하자면서 각기 자국의 독자적인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최첨단 AI 모델과 상업적으로 경쟁한다는 것이 자본력 및 컴퓨팅 인프라 격차를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소버린 AI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 카드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AI 모델에 대한 접근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백업 시스템(backup system)으로 재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질 하락과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재정적으로 보전하더라도, 자생적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실익은 없으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안보 사안'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금번 조치는 앤스로픽의 내부 비시민권자 직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출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 외국인에게 기술과 서비스가 노출되는 것을 수출로 간주하는 간주 수출(deemed export) 규정이 AI 소프트웨어 모델에도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시민권자의 첨단 AI 서비스 접근권 제한을 넘어서, 앞으로 AI 핵심기술 및 소스코드에 접근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도 이중 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고 안보 심사를 통과한 인력만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검증 절차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중국 기술 봉쇄 전략이 특정 기술에서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정화(ecosystem-wide cleansing)'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셋째, 앤스로픽과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객관적 안보 위협을 넘어 당파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규제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였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글로벌 고객사와의 모든 계약에 있어서 미 행정부의 자의적 수출통제 통보 또는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조치를 명시적인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유로 삽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로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 천문학적인 위약금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방어장치라고 볼 수 있다.[6]

6) 국내외 법원과 국제중재법원은 불가항력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모호하고 일반적인 문구(예를 들어 기타 부득이한 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서 내에 정부의 행정명령, 수출 규제, 전염병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유를 적시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근거로 채무 이행 의무를 면제하거나, 정부 조치가 문서에 적힌 그대로 발생했다는 사실 관계만 입증하면 면책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저자 소개 / BIO



왕윤종

- 現)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 前) 국가안보실 3차장
- 前)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비서관
- 미국 예일대학 경제학 박사

Email: yjwang00@hotmail.com

왕윤종 교수는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문 분야는 국제경제학, 국제금융, 중국경제, 경제안보 등이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경제안보 비서관, 3차장을 역임했다. 동덕여대로 부임하기 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SK 중국 경영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Yunjong WANG

- (Curre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nagement, Dongduk Women's University
- (Former)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Security and Cyber Security
- (Former)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Security
- Ph.D. in Economics from Yale University

Professor Yunjong Wang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and MA) and obtained Ph.D in Economics from Yale University. During 1993-2004, he was a Senior Research Fellow and Managing Director for Regional Economic Studies, a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Since he moved to the private sector, he has worked as a senior economist at SK Research Institute (2004-2009), Head of research and Planning at SK China (2010-2012), and Senior Vice President at SK SUPEX Council (2013-2015). He is currently professor a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Management, Dongduk Women's University. He also served as an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security and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economic security and cyber security.